

관광객 5천만 찾는 '서울' 만든다... 명소 20곳 육성

서울관광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

내년부터 5년간 7215억원 투입
DMZ 연계·MVP 코스 등 개발

서울시가 2023년 관광객 5천만명 유치를 위해 꼭 가봐야 할 명소 20곳을 육성하고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워라벨' 시대에 맞는 관광전략을 세우는 한편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지란 오명을 벗고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은 5대 전략 12개 핵심과제(총 96개 사업)로 구성되며, 7215억 원을 투입한다.

5대 전략은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 도시 ▲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관광도시 ▲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 ▲ 국제관광시장



퓨전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앞을 오가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가 고궁 입장에 적용되는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 혜택에서 퓨전한복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퓨전한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리딩(주도) 도시다.

서울시는 외래 2300만 명, 국내 2700만 명 등 관광객 500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한류' 열풍을 타고 방문하는 해외관광객만 바라보지 않고 국내 여행객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천51만명, 국내 관광객은 1천700만 명이었다. 관광객 수를 5년 만에 약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개의 '서울 MVP(Must Visit Place-꼭 가봐야 할 곳) 코스'를 발굴한다.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

울미래유산, 돈의문 박물관, 서울 순례길, 익선동 골목길 등이 대표적 장소다.

또 의료관광, 한류·공연, 템플스테이, 미식투어 등 관광지출이 높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도 확대·강화하고,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MICE 도시'로서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여행 전 과정을 돕는 '스마트 관광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서울로701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방 탈출게임'

방식으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국내 관광객 대상으로는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생애주기별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날씨·교통 등 여행 필수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여행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제는 시민의 생활관광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라며 "그간 성인 위주로 운영된 관광상품을 연령별, 대상별로 코스와 내용을 특화해 국내 관광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여행바우처'를 도입해 2023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6만5000명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2000명에게 여행 활동을 지원한다.

여행바우처는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등 평소 여행이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20만원의 여행비를 내면, 서울시가 20만원의 여행비를 매칭해주는 정책이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관광상품 물품을 통해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세

관광업체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한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공정관광 지원센터'도 설치해 관광산업 구조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조성된 남북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평화관광 주간'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화관광자문단을 가동해 남북상황 변화에 따른 관광전략을 마련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삼정각 등을 연계한 평화관광코스 체험, 남북 식도락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같은 마스터플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2020년까지 도시에 '서울 관광 플라자(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곳에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해 스타트업, 관광협회, 해외관광청 등 관광 관련 기능을 집결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장은 "이번 계획은 기존 외래관광객 위주의 양적성장 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 활성화, 서울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실천과제를 담았다"며 "서울을 꼭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제시문 내용 그대로 쓰면 '논술 감점'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⑩ 논술 감점자 의외로 많아

인문계열 최소 80점 이상 '합격'
'수능최저학력기준' 철저 준비해야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지만 수시 합격에 위해서는 남아 있는 대학별고사가 중요하다. 특히 논술전형의 경우 대부분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인문계열의 경우 최소한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경우 60점 내외의 점수로 합격한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

능대비도 철저히 해서 수능최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화여대의 경우 올해 수능최저를 전년 대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비율과 실질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논술대비전략으로는 우선 전년도 기출 및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 지원대학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모의논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도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북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출제경향의 변

화가 있는 대학의 경우 변화된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발표한 출제도와 평가기준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점 요인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쓸 경우 감점이 되는데 이런 실수로 감점을 당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논술만 보는 대학과 수학과논술과 과학논술을 병행하는 대학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과학논술의 경우 시험범위가 과학 1으로 한정된 대학과 과학 1과 과학 2를 모두 포괄하는 대학으로 다시 세분된다. 예를 들면 건국대, 동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는 과학 1에서만 출제하는 반면, 경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의대), 중앙대는 과학 1과 과학 2에서 모두 출제한다.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한우자조금, 청계광장서 한우 할인행사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자조금, 청계광장서 한우 할인행사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 동결

서울시, 요금인상 추진 탄력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납금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요금 인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근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이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 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요금 인상을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현정 기자

무교동·다동·서소문동 일대 45년만에 정비

서울시, 지역 역사성·정체성 유지
건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개발방식

올 도심 한복판 무교동·다동·서소문 일대가 45년 만에 재정비된다.

재개발구역 일대 건물을 한꺼번에 쓸어내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골목길·도로를 유지하면서 개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유도하는 소규모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등 3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모두 '보류' 결정됐다. 구역

규모가 크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지역 재생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정비 방식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한 뒤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묶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필지 단위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거나, 1~2개 필지를 묶어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한다.

지역의 역사성·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일대 골목길에는 1970년대부터 영업해온 오래된 가게들이 다닥다닥 자리 잡고 있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 일대 10만9천965.8㎡다. 1973년 정비구

역으로 지정된 이후 45년 만의 변화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서소문동, 태평로 2가, 남대문 4가 일대 9만1천488.5㎡이다. 역시 197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서울역과 맞닿은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9만1천872.3㎡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교·다동과 서소문 일대가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970년대는 대규모 철거 후 대형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계획됐다"며 "이번에 정비구역을 바꿔 도시와 도로 여건을 존중하며 대형 빌딩이 올라가지 않고 남은 곳을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곳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김현정 기자